

‘공수처’ 갈등에 등 돌린 與野... 공수처장 추천위 재개

박병석 의장 “논의 재개” 요청
오늘 국회서 4차회의 개의
與, 연내 출범 목표로 총력전
국민의 힘, ‘보이콧 불사’ 입장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 보이콧’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당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4일 “국회의장의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

에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 삭제에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 속도

를 수밖에 없다.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

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킨다고 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든지, 정치의 실종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차원에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과 3일, 9일 본회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체계화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과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조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FTA 정부조달 협상 모색 산업부, 화상 간담회 개최

통상자원부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과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제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FTA 정부조달 협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는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조달 시장 확대와 개방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비료공장과 LNG 액화공장 건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추진하고, 파라과이는 건설·전력·의료 시설 확충 등 신규 사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인프라 관련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전자조달 포털 구축을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남미 시장 입찰 정보 부족,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진출 장애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중남미 조달시장 장벽 해소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산화탄소 포집해 자원으로 재활용 한다

정부, ‘CCU 로드맵’ 발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투이미지

정부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고 이를 포집해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 수립에는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합동 CCU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CCU 기술은 산업시설,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자원화하거나 유용

한 물질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인간 생활에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CCU 로드맵을 크게 ▲CO₂ 포집 ▲CO₂ 활용 ▲CCU 산업전력 ▲CCU 정책·제도 4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성과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CCU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과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로드맵을 토대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CCU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채윤정 SI 전문기자 echo@

쌀 수급 안정위해 정부양곡 37만톤 푼다 한전KDN, ‘정부 혁신 박람회’ 참가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며, 긴장과 연이은 태풍 등으로 전년(374만톤)보다 23만톤(-6.4%), 예상 생산량(363만톤)보다는 12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약 27만톤 감소한 걸 감안하

면, 평년 대비 감소 비율은 통계청 예상의 2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한다. 보통 12월 말까지가 농가 출하 시점임을 감안하면 1월 중 첫 정부양곡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KDN이 오는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혁신 성과를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가치, 디지털 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한전KDN은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AR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솔루션’을 출품했다. 한전KDN이 출품

한 혁신사례는 증강현실(AR)과 자체 개발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적용한 솔루션이다. 이는 도로 밑에 매장된 지하시설물의 설비정보를 전력설비 빅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 작업자가 소지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에 표시해 준다. 일상 예방점검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

한전KDN은 이 솔루션을 올해 한전 지중송전현장 전력설비와 차세대 모바일 전력관리시스템에 적용했다.

/나주=강성대 기자 ksd1008@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 지방 3개 권역 비대면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란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담 지원조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컨설팅 사업과 전담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지역별로 전라도·광주·충청도·대전·세종(11월 24일), 경북·대구·강원도(12월 1일), 부산·울산·경남(12월 3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